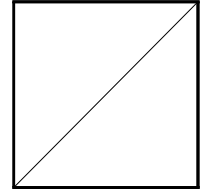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3. 6. (제 4 차)

의
결
사
항

(주)○○○○의 □□저축은행(주)
주식 취득 승인 심사기간 제외 결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최 종 구
제출연월일	2019. 3. 6.

1. 의결주문

(주)○○○의 □□저축은행(주) 주식 취득 승인 심사기간 제외 결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이 □□저축은행(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주식취득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제5항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
제6항제3호에 따른 심사기간 제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저축은행(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한 (주)○○○의
대표자 및 사실상 지배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법 제443조는 동 위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저축은행
주식 취득승인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주식 취득승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관련법규 : <붙임>

<별지>

(주)○○○의 □□저축은행(주) 주식 취득 승인 심사기간 제외 결정안

(주)○○○의 □□저축은행(주)에 대한 주식 취득승인 신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제5항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2019.3.6.부터 (주)○○○의 대표자 및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 심사기간 제외사유

- (주)○○○의 대표자(■ ■ ■) 및 사실상 지배자(◎ ◎ ◎)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후 형사소송절차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이 확정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여
- 이 경우 (주)○○○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식취득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 관련규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제5항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제6항제3호

<붙임>

관련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생략>

[별표 2] <개정 2018. 8. 21.>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제7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p>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p>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 것을 포함한다)</p> <p>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p>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대부업자만 해당한다)·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4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기간
3.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신청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7. (생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안전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전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전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전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6777